



(사)세계평화여성연합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KOREA
UN NGO 포괄적협의기구

04308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19 청파빌딩 4층
Tel. 02-703-9321 www.wfwp.or.kr

DMZ,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

DMZ PEACE ZONE

심포지엄

2021년 7월 1일(목) 오전 10시 - 12시

여주 썬밸리 호텔 그랜드볼룸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주관
(사)세계평화여성연합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KOREA
UN NGO 포괄적협의기구



유엔한국협회

United Nations Association
Republic of Korea



IAAP 경기·강원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ians for Peace

후원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UPF 경기·강원지구
Universal Peace Federation



프로그램

DMZ Peace Zone Symposium

시간	주요내용		
10:00~10:0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0:05~10:30	개회식	환영사	문혜림 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경기·강원)
		격려사	문훈숙 세계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인사말	이호진 회장 (유엔한국협회)
		축사	황보국 회장 (UPF 경기·강원지구)
주제: DMZ,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			좌장: 우종춘 회장 (IAAP 경기·강원)
10:30~11:50	DMZ의 과거와 현재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DMZ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방안	성경일 교수 (강원대학교)	
	DMZ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생명평화경제	정범진 부이사장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종합 토론		
11:50~12:00	정리 및 기념촬영		
12:00~13:00	만찬		



주요 참석자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겸 한국회장

- 現 유니버설발레 단장
- 現 국제공연예술총회(ISPA)서울총회 자문위원
- 現 선학학원 부이사장



문혜림 세계평화여성연합 경기강원 회장

- 現 세계평화영부인연합 한국 코디네이터
- 前 한국 필리핀국제가정협의회 회장
- 前 세계평화여성연합 한국 부회장



이호진 유엔한국협회 회장

- 現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EPG 현인위원
- 前 KBS 객원해설위원
- 前 미국 브루킹스 연구원, Non-resident Senior Fellow



황보국 천주평화연합 경기강원지구 회장

- 現 신한국가정연합 공동회장
- 現 세계일보 경기강원 지사장
- 前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종춘 세계평화학술인연합 경기강원 회장

- 現 (사)금수강산가꾸기협의회 이사장
- 現 강원도 남북산림교류 협의회 위원
- 제11회 DMZ평화상 수상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現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겸임교수
- 前 남북관계발전위원회민간위원



성경일 강원대학교 교수

- 現 (사)한국축산학회 회장
- 前 한국동물자원과학회 부회장
- 前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학장



정범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부이사장

- 現 디엠지평화생명협동조합 이사장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평화발전분과)
- 現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경제분과)

DMZ Peace Zone Symposium



발제1

DMZ의 과거와 현재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목차

- I. DMZ의 과거
- II. DMZ의 현재
- III. DMZ의 가치
- IV. 독일의 교훈
- V. DMZ 평화지대화 방향
-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VII. 고려사항

I. DMZ의 과거

□ DMZ 평화공원

- 2013. 박근혜 대통령 미 의회연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
 - 국정과제 125 “작은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주요 추진계획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건설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포함
- 2013.8.15 광복절경축사, 북한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
- 2014. 대통령 UN총회 연설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필요성 및 국제사회 협력 요청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DMZ World Eco-Peace Park)로 명칭 변경

I. DMZ의 과거

□ DMZ 평화공원

- 1992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DMZ 대규모 공원 조성 남북 양측에 제안
-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정부가 'DMZ의 평화적 이용' 제안
- 2009년. 환경부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실시
- 2010년. 환경부, UN, IUCN 세계평화공원 조성 권고문 채택

I. DMZ의 과거

□ 북한 반응

- 10.4. 남북정상회담 'DMZ의 평화적 이용', 시기상조를 이유로 거부
- 2013.5. 박근혜 대통령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DMZ생태세계평화공원 구상 제시
 -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박 대통령 비난
 - 2013.8. 김양건 부장, "개성공단 잘 되면 DMZ생태세계평화공원 잘 될 것" 언급
- 2014.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박대통령에 공개 질문장
 - 서해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답변 요구
- 2014.9. 박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언급
 - 조평통 비난, 10.4선언 합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행 촉구

II. DMZ의 현재

□ DMZ 비무장화

- 남북 군사분야합의서(2019.9.19)
 - JSA 비무장화 및 지뢰제거, GP 시범철거 실시
- DMZ 비무장화 등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현 상황에서도 진전 가능
-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적대관계 해소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의지 표명(2019.1)

II. DMZ의 현재

□ 북한 반응

- 남북관계 대적관계 전환 선언(2020.6.)
 -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DMZ관련 4대 군사행동 예고(인민군 총참모부)
 -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 ▲감시초소(GP) 복원, ▲접경지역 대남전단 살포
- 4대 군사행동 이행 보류(2020.6.)
 - 김정은 위원장이 4대 군사행동 보류를 결정(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

II. DMZ의 현재

□ DMZ 국제평화지대화

- 문재인 대통령, 제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통해 DMZ국제평화지대화 구상 발표(2019.9)
 -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개성-판문점 지역 평화협력지구 지정
 - DMZ에 유엔기구와 국제기구 유치DMZ 지로 제거
- 문 대통령, 개성공단 재개 시 다국적기업 공단화 의사 표명
 - 청와대 경제계 오찬간담회(2019.10.4.)

III. DMZ의 가치

□ 한반도와 동북아의 분단선

- 한민족 생태계의 단절,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권간 소통의 단절
- 냉전기 한반도 남북 분단선
 -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간 대립과 갈등을 상징
 - 첨예한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의 현장
- DMZ는 한미일 vs 북중러 삼각대립구도의 전선

III. DMZ의 가치

□ 한반도와 지구촌의 전쟁기념관

- DMZ는 살아있는 전쟁기념관으로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내재
 - 민족간 갈등으로서 한국전쟁의 기억의 공간
 - 국제전쟁으로서 한국전쟁의 기억의 공간
- DMZ내 무장 및 시설, 군사정전위와 중립국 감시위원회 등 다양한 기억의 소재를 포함

III. DMZ의 가치

□ 한반도 및 세계평화의 상징적 잠재성 내재

- DMZ 평화지대화가 완료될 경우 한반도 평화상태의 달성과 아울러 세계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전환이 가능
- 한국적 평화모델인 동시에 세계적인 평화의 아이콘 및 랜드마크로서의 잠재성을 내재

III. DMZ의 가치

□ 성찰의 장소

- 동족상장의 전쟁과 이념의 극단적 대립의 기억과 현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
-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체제는 현재진행형이며, 한반도에는 냉전구조의 관성이 작동
- 전쟁과 분단, 갈등과 폭력적 대립에 대한 성찰의 장소로서 성격을 내재

III. DMZ의 가치

□ 한반도 및 유라시아 생태의 거점

- DMZ는 전쟁의 상처를 자연 스스로 치유한 고유한 생태적 의미를 내재
- DMZ는 한반도의 횡적 생태축인 동시에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생태축
- DMZ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생태계를 연결하는 동북아 생태계의 거점

III. DMZ의 가치

□ 다크 투어리즘

- DMZ는 민족전쟁이자 국제전쟁인 한국전쟁의 과거와 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내재
- DMZ 외국관광객의 90%가 한국의 관광지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곳으로 평가, 한국 방문 외국관광객 60%내외 DMZ 인지
-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 DMZ 접근성 개선 등이 수반될 경우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가능성

III. DMZ의 가치

□ 세계인의 유산

- DMZ는 이미 전세계인의 기억속에 각인된 국제적 장소라는 점에서 남북한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내재
- IUCN, 넬슨 만델라 대통령 등 이미 DMZ의 평화적 이용 또는 세계평화공원 등의 구상을 제시
-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생태를 애호하는 세계인의 관점에서 조망이 필요

IV. 독일의 교훈

□ 동서독의 DMZ

- 분단 동서독간에도 DMZ 존재
 - 1393km, 폭 50-200m, 동독주민의 탈출 감시가 주목적
- 고속도로 4개 등 도로 10개, 철도 9개 노선이 분단 동서독을 연결
- 서독의 경우 분단체제에서도 DMZ 인근까지 평화적 이용 가능



IV. 독일의 교훈

□ 독일 통일 후 DMZ 활용

- 급작스러운 통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DMZ 활용 문제에 직면
 - 난개발 및 원소유주 문제 등 부각, 개발과 보존 문제
- 환경단체가 보존 주창, 정부가 수용, 정부 지원 및 모금 등으로 재원 마련
 - 생태보전 및 친환경 이용 농업 등 혼용
- 엘베강 생물권보존지역, 하르츠 국립공원, 뮌헨 생물권보존지역 등 150여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로 기능
- 1250km 그루네스 반트로 보호, 감시탑 및 철조망 등 일부 시설을 기억의 공간 및 평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IV. 독일의 교훈

□ 시사점

- 종합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체계적인 활용에 한계
 - 평화 및 생태적 이용의 체계화에 한계
- DMZ 군사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 전쟁 기억을 무계획적으로 철거
- DMZ 전체를 벨트화하는데 실패, 중간에 단절 구간 형성
 - 생태벨트 보다는 생태 네트워크 또는 생태 섬으로 기능
- 한반도 DMZ의 미래에 대한 사전적, 체계적 대비 필요

V. DMZ 평화지대화

□ DMZ 비무장화: 시사점

- DMZ는 남북한을 넘어 지구촌 차원의 냉전을 상징하는 장소이며, 고유한 생태계를 구성
 - 군사작전에 의한 단순철거 방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
- DMZ 전체의 비무장화 및 평화지대화를 위한 단계적 과정이 예상되는 바, DMZ의 활용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
- DMZ의 평화, 생태적 브랜드 가치는 천문학적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및 DMZ 비무장화의 본격화에 따라 가치의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
- DMZ GP의 폭파 방식 철거는 비판적 문제제기에 직면할 가능성
 - DMZ는 그 자체로 냉전의 유산과 전쟁박물관의 의의를 내재

V. DMZ 평화지대화

□ DMZ 비무장화: 의의

-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화 착수
 - JSA 비무장화 및 지뢰제거, GP 시범철거 작업, 화살머리 고지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유수역 공동조사를 실시
- DMZ내 중무장 군사시설의 제거 및 비무장화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V. DMZ 평화지대화

□ 평화지대화 방향

- 한국적 평화모델 창출
 - 남북한간 항구적 평화의 정착 및 민족화해의 공간으로 승화
- 세계적인 평화의 랜드마크화
 - 전쟁의 기억과 평화에 대한 성찰을 상징하는 세계 평화의 아이콘으로 승화

V. DMZ 평화지대화

□ 평화지대화 방향

-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생태 네트워크의 거점화

- 남북한의 생태축을 연결하고, 동북아 유라시아의 생태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전

- DMZ 전역의 평화·생태 벨트 구축

- 점▶선▶면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DMZ 전역을 단일 평화·생태벨트로 연결

- DMZ 전역의 보존을 기본원칙으로 철도 도로 등 필요시설의 고가화 및 지하화로 영향을 최소화

- 대규모 시설 및 건축물의 경우 DMZ 인접지역 활용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개념

- DMZ와 북측 개성을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지대를 의미함.

- DMZ를 중심으로 인근 접경지역을 포함함.

- 넓은 의미에서 남북 접경지역까지 공간적 범위의 확대가 가능

- DMZ와 접경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함.

- 남북, 북미관계를 넘어 UN차원의 보장을 통해 북한의 체제보장과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

- 국제협력을 통해 북측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공동번영을 달성함.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제안: 문재인 대통령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19.9.24.)

-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함.

-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제안함.

-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을 제안함.

- 개성공단 재개 시 다국적기업 공단화 청와대 경제계 오찬간담회(2019.10.4.)

-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제안함.

- 국제사회 보장을 통한 DMZ 평화지대화로 북한 안전보장,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DMZ를 관통하는 한반도 동북아 경협 가속화 가능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의 결의 등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합의를 도출함.

-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도화

- 유엔 산하에 가칭 'DMZ 평화 특별위원회' 같은 실무기구를 설치해 DMZ의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감시함.

- DMZ 유엔사령부 관리기능을 평화적인 유엔의 기구로 이관

- DMZ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회복

- 유엔사령부와 같이 DMZ 주권 제약이 아닌 평화의 유지와 관리에 국한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국제평화지대화

- 남북 공동 가칭 '한반도 접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함.

- 동서독의 경우도 분단기간 접경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에 대해 협의
- 전염병, 수자원 관리 등 당면 접경지역 현안 협의
- DMZ의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세계평화협력지구화

- 평화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유치함.

- 가칭 '한반도 평화센터' 또는 '세계 평화연구원'을 설치, 남북협력, 평화연구 및 활동의 거점으로 육성
- 세계 평화대학 및 한반도 평화대학 등 평화교육 시설 유치 운영
- 세계 청소년 평화캠프, 평화박물관 등을 조성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판문점-개성 평화지대화

-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을 본격화함.

- '남한 자본·기술 + 북한의 자원·노동력'의 단순 등식을 넘어 AI 및 4차 산업시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남북 산업단지로 개발
- 한반도 평화경제의 거점화

- 국제공단화를 도모함.

- 미국, 중국, EU 등 세계 투자자본 및 다국적 대기업 유치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국제기구 유치

- UN 서울사무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CBD(UN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기구 등, DMZ 인근 유치

- DMZ내 인공적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전체를 벨트 및 하나의 단일 공간으로 인식하여 평화·생태공원화
- DMZ내 시설 설치시 생태 훼손 및 DMZ 브랜드가치 저하 우려
- 필요시설의 경우 DMZ 인접 남북 지역을 활용

- 한국 주도 평화·생태 관련 국제기구 창설, DMZ 인근 유치 방안을 모색함.

- 가칭 'WPBO'(World Peace & Biodiversity Organization) 창설 고려
- 분쟁 갈등 해결, 평화문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평화 & 생태 관련 연구와 활동의 세계적 거점화 도모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협력체제를 형성함.
 - 가칭 'DMZ 유네스코 등재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 유네스코 등재 이후 남북 공동관리기구로 발전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조사 사업을 사전적으로 실시

VII. 고려사항

■ DMZ 브랜드 가치의 실현 및 인위적 훼손의 최소화

- DMZ는 전체 그 자체로 브랜드가치를 내재, 하나의 연결된 공간과 벨트 개념으로 인식
 - DMZ내 인위적 시설 설치를 금지, 최소화
 - 필요시설의 경우 DMZ 인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

■ DMZ 보존 및 활용 설계도 작성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실행 및 평화지대화를 큰 틀의 DMZ 보존 및 활용 설계도내에서 진행함.
 - 대내적 준비와 아울러 남북이 종합적인 공동조사를 실시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지뢰제거

- DMZ 전체의 지뢰제거에 기술적 한계가 있음.
 - DMZ 지뢰 매설 지도의 제약 및 장기간 방치로 인한 자연적 분산 등
 -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생활지역 지뢰 매설로 제거 시급성 내재
 - 한반도 DMZ 지뢰 대부분 무인지대 및 생태 우수지역에 매설
 - DMZ 전체의 지뢰 제거 시 자연 및 생태계 영향 우려 상존
- 지뢰문제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 필요지역을 우선으로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해 제거함.

VII. 고려사항

■ 평화가치의 구현과 연동

- DMZ의 평화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실행 및 평화지대화 조치를 진행

■ 생태가치의 구현과 연동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실행 및 평화지대화 조치가 DMZ 고유의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추진

VII. 고려사항

■ DMZ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
- DMZ는 평화, 생태, 역사, 관광, 인문학 등 복합적 의미를 내재, 국내외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
- DMZ는 남북한을 넘어 인류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특별위원회에 세계 차원의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필요

■ 참여형 '평화의 축제' 개념 적용

- DMZ의 평화지대화를 군사차원의 작전개념이 아니라 남북한과 세계가 경험한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평화의 축제로 승화
- 평화지대화 전과정 및 보존과 활용 계획의 수립과정을 개방하여 국민참여형으로 진행하고, 과정자체를 국민축제로 승화

VII. 고려사항

■ 분단비용의 균등화 개념 적용

- “접경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네!”
- 접경지역은 장기간의 분단체제에서 고비용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개발지체와 제도적 및 생활세계 차원의 제약에 의해 피해를 감수
- DMZ의 평화지대화 과정에서 분단비용을 균등화하는 개념을 적용함.
 - DMZ의 평화지대화와 부합하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인프라 개선에 투자
 - 접경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의 확대 모색

발제2

DMZ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방안

성경일 교수
(강원대학교)

서론

남북교류협력의 시원(始原)

가 습을
놓여주는
처 생각
고 있다.
비밀은 다른데
다. 농경사회가
한국인과 항상
문이다. 소를 생
불렀다. 가족은
부른다. 생구는
언이나 머슴을
생구라고 부른
를 소중하게 생
다. 정월 첫째 축일(丑日)에는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
며 쇠죽에 콩이 넣어 먹었던 풍속도 있다. ▼세종때
명재상 황희(黃喜)가 짚은시절 길을 가다가 농부가 2마
리 소로 밭을 기는 것을 보고 어느 소가 더 잘 기는냐고
물었던 일화가 전한다. 농부가 귀에 말로 이쪽 소가 더 잘
간다고 했다. 어째서 귀에 말로 말하는가라고 물으니 비록
짐승일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고 대답했다.
소와 농부의 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황희는 정사를 처리했
다고 한다. 소를 사람처럼 존중했던 시례라 할 수 있다.
▼역사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한 것은 인간이었다. 세계의
역사발전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지, 인간의 행동으로 이
루어졌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가족의 사랑과 씨앗의 재배가 역사의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역사의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
역사가 인간의 의지와 행동으로 발전하고 변하는 것은 확
실하지만 가족과 씨앗은 역사변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 통일소떼
1001마리의 비밀은 물의 역사 발전과 변화를 함께 지켜
볼 것이라는데 있다. <金永琪는설주간>

1998년 북강원도 출신 정주영
현대 회장

DMZ를 통한 통일소떼 1,001마리

- 소(生口)를 사람처럼 존중 :
 - 세종 명재상 황희의 일화
- 인간의 의지와 행동 :
 - 역사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
- 역사의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 :
 - 가축과 씨앗

우리 곁에 항상 있는 한우를 통한
통일에 대한 염원

중단 없는 남북교류 협력

남북공동선언 후속 이행(산림협력)

- 2차례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 산림병해충 방제 및 양묘장 현대화 협력에 합의(2018. 7. 및 18.10.)
-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금강산 지역 현장조사 실시 후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50톤을 북측에 제공(2018.11)
- 양묘장 현대화 협력을 위해 122호 양묘장, 중앙양묘장, 산림기자재 공장 현장방문(2018.12)
-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 : 고성(2020), 파주(2020), 철원(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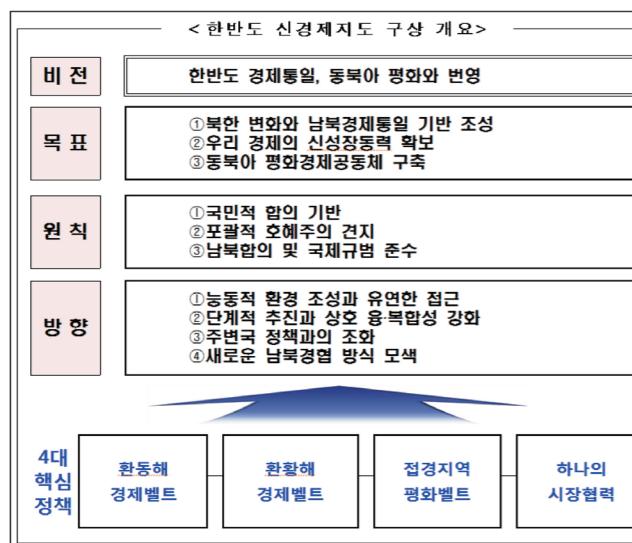


< 18년 남북 간 산림부문 주요 합의사항 >

구분	주요 합의사항	비고
제1차 산림분과회담 (' 18.7.4.)	양묘장 현대화, 산불공동대응 등 산림조성 보호협력, 접경지역 병해충 공동방제 등	분과위원장 (산림청 차장)
제2차 산림분과회담 (' 18.10.22.)	11월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제 제공, 양묘장 현대화, 산불공동대응, 산사태 예방 사업 등 추진	분과위원장 (산림청 차장)

대북농업 관련 정부의 구상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추진(김, 2020)



당면과제 협력 (김, 2020)

-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감안하여 세계 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측에 지원하기로 결정(2019.6.19.)



- 현재 중단 상태
- 북측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을 공식 신고 (2019.5.30)함에 따라 북측에 협력 의사 전달 (2019.5.31)



- 우리나라의 ASF가 발생(2019.9.17)함에 따라 북측에 협력 의사 전달(2019.9.18.).
- 현재 북측 반응이 없는 상황

남북농업협력 기본방향 (김, 2020)

- ◆ 남북간 합의한 산림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 조성 시 농업협력 추진 검토
- ◆ 남북 농업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한의 식량난 완화와 남북 상호 간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 (농업분야) 남북간 기 합의사항(2005,2007)을 검토하여 대북제재 완화 시 북한에서 관심을 갖는 사항 중심으로 농업 협력 과제 발굴 · 검토
 - 북한 지역별 재배 가능 품종 · 재배기술 연구
 - 동식물 검역 · 방역 협력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 (산림분야) '남북산림협력 분과 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 추진
 - 황폐화된 산림 복구 준비를 위해 국내 종자 · 묘목 지원 기반 구축



대북농업 관련 강원도의 구상

- 축산부문 남북협력방안 도지사 간담회(2018.4.24)
- 남북강원도 축산협력 추진계획(안)
 - 남북 강원도 세포지구축산기지(세포축산단지) 축산교류사업 추진
 - 상호 신뢰 형성 및 공동이익 극대화
 - 남북 강원도 공동방역 시스템 구축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공동 방역
 - 축산물 수출 단지 구축
 - 중국, 러시아 등 축산물 수출 거점 육성
 -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인도적 축산물 지원
 - 우호적 여론 형성 및 국내 수급조절 역할 병행
 - 상호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발굴
 - 축산 토종 가축자원 교류, 맞춤형 축산 교류 확대

7

남북간 축산분야 협력사업 사례

- 북한은 축산협력에 적합한 부지와 인력을 제공하고, 남한은 사료와 설비, 수의방역 약품과 기술, 종축 등 제공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9~2003년 동안 3개 지역에 젖 염소 시범목장 개발
 - 평양시 상원군 용곡목장에 추진한 젖염소 500마리 규모의 시범목장
 - 사료, 목초지 조성, 착유 및 가공 · 포장 설비, 수송차량 등 지원

8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 참여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제 선제적 발굴 필요

- 지역단위의 남북농업협력을 전담하는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가 적절.
 - 농림수산분야의 협력에는 성격 및 기간, 규모 등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와 거버넌스가 매우 유용함.
- 기초자체는 대북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접근보다는 기능적 협력을 중시하는 관점이 필요함.
 - 과제의 적합성, 사업의 시의성, 규모 및 기간의 적정성, 그리고 협력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한 검토 중요함.
- 지난 20여년 동안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체가 협력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례는 없음.
 - 향후에는 당국 간 합의사항 또는 북한의 주요 정책이 지방에서 시행되는 사례에 주목, 관련 협력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9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력추진체계 강화

-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독자적인 협력사업 수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독자적인 대북 창구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력사업은 ‘남북 간의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에 초점 강화
 -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 방식 유도
 - ‘남남갈등/진영논리’의 여지를 예방하는 운용방식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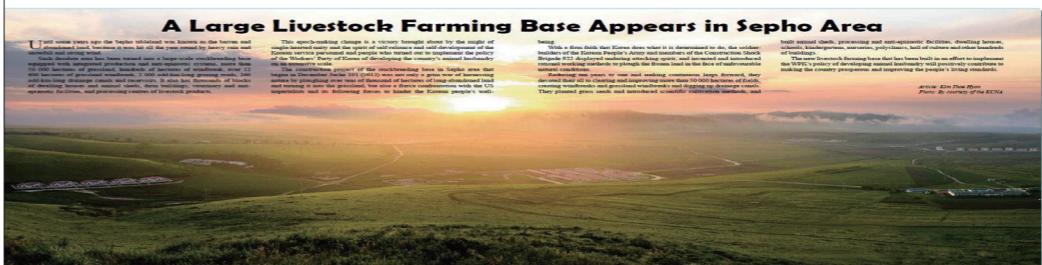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농축산업 협력사업 가능성

- 남북간 교류 협력에 있어서 민간 뿐만 아니라 농업개발협력의 추진 주체로
지자체의 협력이 부상되고 있음
 - 지자체 행정체계 및 협력체계는 대북사업에 매우 유용
 - 지자체에는 농산, 축산, 과수, 임업, 시설농업,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전반적 행정체계와 관련 협력체계 등이 잘 구축되어 있음
 - 남북농업협력의 실무를 담당하는데 매우 유용한 추진체계로 작동할
것임.

세포축산단지

세포축산단지 축산분야 현황(2017.10.28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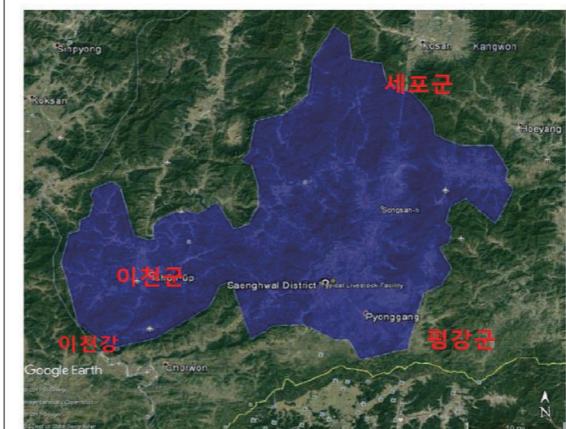
- 세포 : 비포, 바람포, 눈포
 - 개발면적 : 5만 ha
 - 방풍림 : 수십 ha(7,800여만 그루의 나무)
 - 풀판보호림 : 12,600 ha
 - 방목도로 : 2,000 km
 - 배수로 : 360 km
 - 계단식 저수지(저류지) : 10개
 - 주거시설 : 주택(수백 동), 학교, 유치원, 진료소, 문화회관, 목욕탕, 이발소 등
 - 종합생산통제실, 세포축산과학연구소, 수의방역소, 농업과학기술선전실, 수의실, 검역소, 축산물의 가공시설, 통신, 전력설비(메탄가스포함) 등



출처 : KCNA, 2018

12

세포군, 이천군, 평강군에 걸쳐 있는 대규모 축산단지



출처 : 구글 어스



1

대규모 면적에 따른 자연지리적 특성(지형, 초지 등)을 고려한 풀사료의 이용 및 가축 사양 구분 (2021. 1.28, 노동신문, 당8차대회)

o 풀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물의 적정 배치 및 비배 관리

- 초지(다년생: 목초류) : 애국풀, 자주꽃자리, 퀴, 싸리나무
 - 청예(청초) 이용
 - 방목 이용
 - 건초 이용
 - 사일리지 이용
- 사료작물(단년생: 옥수수, 호밀, 귀리 등) : 청예 및 사일리지 이용
- 토지 지력 향상
- 작업의 기계화(초지 및 사료작물포 등)
- 사료용 종자 자체 생산

o 축종 및 성장단계별 사양관리기술 및 수의방역사업의 고도화

- 선진과학기술 도입으로 풀먹는 가축 생산
- 인공수정사, 수의사 실무능력 배양
- 약초를 이용한 고려수의약품 개발

18

평창-세포축산단지 협력방안

평창 산지초지축산의 경험(반성과 과제)

초지가 방목이 아니라 운동장



나무없는 초지조성



(반성)

- 나무없는 산지초지 조성
- 초지 : 운동장

평창의 경험

입업관점의 적극적 도입

세포축산단지에 적용

(과제) 산림복합경영 (Silvopastoral system)

20

임농복합경영 확대로 농업과 축산업 간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확립

*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 축산을 통한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 농업과 임업 생산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형태
(예: 안변군의 화산, 모풍 및 비산리 협동농장에서 구축하여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함)

- 임농복합경영은 북한의 농경지부족과 산림황폐, 경제성 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목적으로 산지 등에서 농업, 임업 및 축산업을 같은 site에서 함께 하도록 하는 토지관리시스템
 - 산림농업(Agroforestry) : 방풍시스템, 임지축산시스템, 임지작물시스템, 하천부지관리시스템, 산지농업시스템
- 임지축산시스템
 - 초지 기반의 축산 + 임업공존하는 생산방식: Silvopastoral system
 - (남한) 산지생태축산(Eco-pastoral System in Alpine Gras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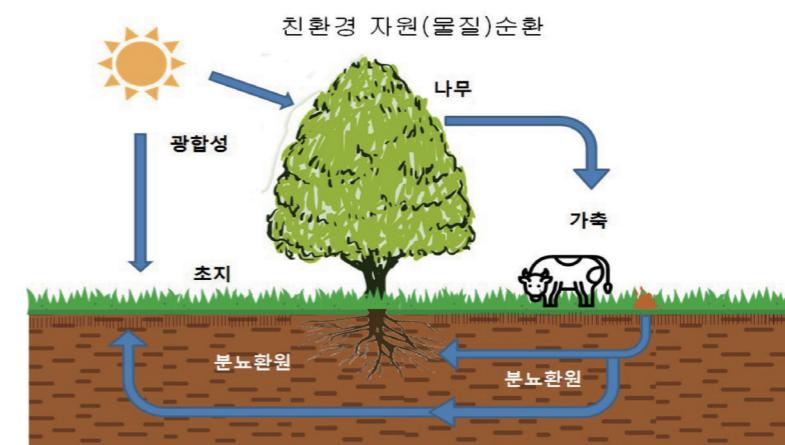
※ 농림축분야가 결합하는 형태의 축산 정책

※ 초식가축(초지)중심의 물질순환형 생산시스템

19

임농복합경영(고리형 순환생산체계)

(임업과 축산이 공존하는 토지이용체계: Silvopastoral system)



- 초지축산과 임업이 공존하는 복합경영의 형태
- 축산 or 임업 단일 경영보다 수익성 향상
- 수질 오염과 토양의 오염 및 유실이 적은 친환경 축산으로 환경보존에 기여

21



임간(林間)초지에서 방목

22

요약(세포축산단지와의 협력 가능성 평가 성경일 외, 2020)

구성요소	북한	세포축산기지 여건	
		현황	협력강도 ¹⁾
축산입지	적극 권장	좋음	*
가축질병	청정지역 존재	좋음	***
축산기술(사양, 육종, 번식 등)	미비	보통	***
축산기반(자재, 시설, 장비 등)	미비	보통	**
투자재원	투자 필요	보통이하	***
축산분뇨(유기질비료 자원)	부족	보통이하	***
배합사료 생산 기반	부족	보통이하	**
배합사료 생산 기술	미비	보통	**
풀사료 생산기반	가능지역 존재	좋음	***
축산물 가공기술	미비	보통	**
축산물 유통구조	미비	보통이하	**
축산물 등급제	미비	보통이하	**
질병 방역체계	미비	보통	***
에너지	미비	보통이하	***

자료 : 김경량(2007)과 최운재(2018)을 기반으로 필자가 작성

¹⁾ 세포축산기지에서 평창과 북한 협력하여 할 사업과 시급성을 강도로 표시

*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남북협력의 시급성이 낮은 경우 / ** 여건이 보통으로 남북협력의 시급성이 비교적 있는 경우 / *** 여건이 비교적 어려워 남북협력의 시급성이 아주 강한 경우

24



임내(林內)초지에서 방목

23

남북 협력의 최적지 평창

- 남한에서 가장 선진적 초지축산기지인 평창
 - 산지초지 기반의 대표적 축산 : 초지면적 3,600ha(하늘목장, 삼양목장, 양떼목장 등)
- 평창 대관령 : 남한 최대의 육상 풍력단지
 - 49기설치(5만가구 이용량). 풍속 : 7.5m/sec
- 북한 북강원도의 세포지구축산기지(세포군+이천군+평강군. 이하 세포축산단지) 자연환경
 - 해발 : 365(평강) ~ 641m(세포) (평창 736m)
 - 기온(2011~2020, 평강) : 9.3°C (평창 7.5°C),
 - 강수량 (2011~2020, 평강) : 1,407mm(평창:1,329mm)
- 평창군과의 남북협력사업 최적지, 세포축산단지
 - 유사한 자연 환경 및 여건을 가지 있어 축산협력의 가능성성이 가장 높음
 - 남북 축산기술협력이 기본
 - 자연환경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풍력, 태양광 등)

25

평창군의 축산업 입지

- 한우의 메카
 - 대한민국 한우의 자존심 : '평창 대관령 한우' 브랜드 보유
 - 국내 최고의 한우브랜드 : 대관령한우의 상표등록 및 서비스등록
 - 명품 한우 및 슈퍼 한우 생산 기술 특허 보유
 - 축산물 우수브랜드 인증(16년 연속), 대한민국 LOHAS 인증(12년 연속)
 - 친환경축산업 선도 : 국내 유일 HACCP 인증.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한우 서포터 선정
- 산지초지의 메카
 - 남한 최대의 초지면적 보유
 - 대관령 고원초지: 50년의 유형 유산으로 존재
 - 고원초지의 조성 및 관리 기술 보유

26

평창 평화도시의 발전방향

- 평화 : 2018 평창 올림픽의 최대 유산
- 평화도시 : 한반도 평화가 시작된 평창을 특화
- 평화 유산 :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 글로벌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국내·외 환경 조성
- 남북교류협력사업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른 적극적 발굴 추진
- 지속가능한 평화도시 기반 조성 : 평화올림픽 레거시와의 연계

28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더불어 행복한 균형발전											
군정 기조	5대 목표										
	<table border="1"> <thead> <tr> <th>평화의 시작 평창과 함께</th> <th>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th> <th>소득이 안정된 농촌</th> <th>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th> <th>모두가 행복한 복지</th> </tr> </thead> <tbody> <tr> <td>1. 평창시설치 (강원도 연계추진) 2. 열린혁신 지자체 구축 (능동적 행정조직) 3. 평창평화포럼 개최 4. 평화 허브 조성을 위한 남북 교류 활성화</td> <td>1. 평창형 HOPE 관광매력 거점도시 추진 (문체부육성 사업) 2. 노선 일원 웨이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3. 산촌거점 권역 육성 사업사업 4. 지역특화 문화관 광인도자 구축</td> <td>1. 중소농, 청년농, 어성농 등 지역농업 주체 적극 육성 2. 농축산업 판로확보 및 경쟁력 강화 3. 농촌을 기공 유통 시설 기반 구축 4. 지속 가능한 농업 업분야 지원 확대</td> <td>1. 일자리창출 기업 환경 조성 2. 사회적 경제 혁신 센터 설치 3.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사업 적극 유치 및 관리 4. 편리하고 활력 넘치는 정주환경 조성</td> <td>1. 의료·교육 걱정 없는 행복한 출산 지원 2. 시민자대 없는 모두를 위한 복지 구현 3.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4. 특화된 교육 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교육기반 조성</td> </tr> </tbody> </table>	평화의 시작 평창과 함께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소득이 안정된 농촌	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	모두가 행복한 복지	1. 평창시설치 (강원도 연계추진) 2. 열린혁신 지자체 구축 (능동적 행정조직) 3. 평창평화포럼 개최 4. 평화 허브 조성을 위한 남북 교류 활성화	1. 평창형 HOPE 관광매력 거점도시 추진 (문체부육성 사업) 2. 노선 일원 웨이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3. 산촌거점 권역 육성 사업사업 4. 지역특화 문화관 광인도자 구축	1. 중소농, 청년농, 어성농 등 지역농업 주체 적극 육성 2. 농축산업 판로확보 및 경쟁력 강화 3. 농촌을 기공 유통 시설 기반 구축 4. 지속 가능한 농업 업분야 지원 확대	1. 일자리창출 기업 환경 조성 2. 사회적 경제 혁신 센터 설치 3.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사업 적극 유치 및 관리 4. 편리하고 활력 넘치는 정주환경 조성	1. 의료·교육 걱정 없는 행복한 출산 지원 2. 시민자대 없는 모두를 위한 복지 구현 3.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4. 특화된 교육 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교육기반 조성
평화의 시작 평창과 함께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소득이 안정된 농촌	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	모두가 행복한 복지							
1. 평창시설치 (강원도 연계추진) 2. 열린혁신 지자체 구축 (능동적 행정조직) 3. 평창평화포럼 개최 4. 평화 허브 조성을 위한 남북 교류 활성화	1. 평창형 HOPE 관광매력 거점도시 추진 (문체부육성 사업) 2. 노선 일원 웨이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3. 산촌거점 권역 육성 사업사업 4. 지역특화 문화관 광인도자 구축	1. 중소농, 청년농, 어성농 등 지역농업 주체 적극 육성 2. 농축산업 판로확보 및 경쟁력 강화 3. 농촌을 기공 유통 시설 기반 구축 4. 지속 가능한 농업 업분야 지원 확대	1. 일자리창출 기업 환경 조성 2. 사회적 경제 혁신 센터 설치 3.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사업 적극 유치 및 관리 4. 편리하고 활력 넘치는 정주환경 조성	1. 의료·교육 걱정 없는 행복한 출산 지원 2. 시민자대 없는 모두를 위한 복지 구현 3.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4. 특화된 교육 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교육기반 조성							

27

평창-세포축산단지 축산협력 의의

- 강원도 축산 : 1910년 국립춘천종묘장 100여년의 축산관련 기술 보유
- 평창군 : 대관령 고원산지초지 조성과 이용에 대한 유무형의 기술/경험 축적
- 세포축산단지 : 기본적인 각종 인프라 구축 완료

* 축산으로 남북 상호 공감대 형성이 용이
* 기반시설 등이 상호 협력적 또는 보완적 관계에 있음

평창-세포축산단지 축산협력의 미래가치

- 남강원도 평창-횡성-홍천-춘천-화천-철원은 강원도 한우생산의 중심축
- 북강원도(세포-평강-이천)이 연결되는 세포축산단지 역시 세계최대 축산단지
- 남강원도와 북강원도의 축산벨트 연결 가능

*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연계/확장되어 새로운 파급효과 가능
* 축산부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가능성

29

평창의 장점

- **(평화유산 계승)** 2018 평창 올림픽의 최대 유산인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특히 농림축산분야 협력 추진 필요
- **(하나의 강원도)** 남강원도 축산벨트(평창-횡성-홍천-춘천-철원)와 북강원도 세포축산 단지(이천-평강-세포군)을 연결하는 축은 향후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아 발전 잠재력 보유
- **(초지축산의 남북교류협력)** 세포축산단지는 기후 및 지형적으로 평창군과 유사하며, 특히 산지초지축산 측면에서는 상호 교류협력으로 남북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축산분야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협력과제 발굴)**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하여 세포축산단지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구체적으로 조사·검토하고, 평창군이 나아갈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음.

30

세포축산단지와의 협력 모델(안)

- 〈개발협력지원〉
- 세포축산단지 초기 조성
 - 우량 송아지 생산 협력
 - 축산물 가공시설 협력
 - 가축질병관리체계 개선 협력프로그램
 - 초기관리기술 개선 협력프로그램
 - 사양관리기술 증진 협력프로그램
 - 축산물가공기반 조성 협력프로그램
 - 대가축 및 가금류 축종개량 협력프로그램
 - 저온물류체계 개선 협력프로그램
 -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시범농장 협력프로그램
 - 신재생 지역에너지 개발 협력프로그램
 - 축산업 경제협력기반 조성 협력프로그램
 - 재생에너지사업
 - -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 -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 - 세포축산기지 풍황자원 조사사업

남북한 관계 개선 정도(성숙도)에 따른 사업구분 필요

교착단계, 재개단계 및 심화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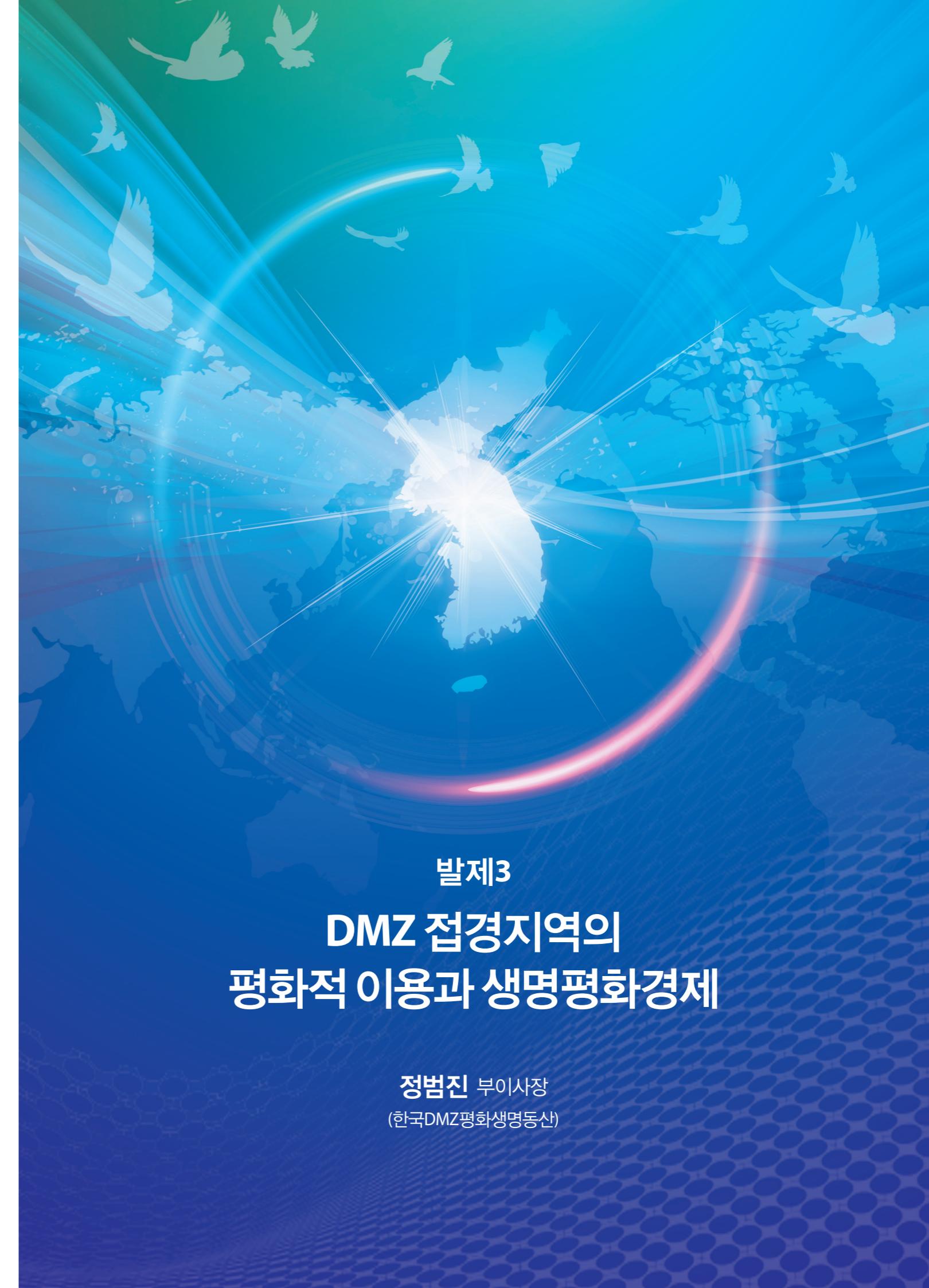
31

DMZ 평화를 위해

세포축산단지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의 시원(始原)이 열리기를 …



32



발제3

DMZ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생명평화경제

정범진 부이사장
(한국DMZ평화생명동산)

DMZ·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생명평화경제*

- 기후위기, 성장 불가능시대, 산업의 대전환을 위하여 -

1. 2021년 한국 사회: 외형적 성장,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 2019년 발생 이후 전 세계적인 혼란과 후퇴를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반기 정도에 정상적 생활로의 복귀가 점쳐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또 다른 그리고 보다 강력한 형태의 감염병이 변이형태 또는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빼뜨리지 않고 있다.

○ 과거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인구는 4천700만 명에서 5천178만 명으로, 무역 규모는 3,327억 4,852만 달러에서 9,801억 3,080만 달러로 증가했다. 국내 총생산(GDP)은 5,763억 달러에서 1조 6,382억 달러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1만 2,178 달러에서 3만 1,880 달러로 증가했다.

<표> 한국 사회의 외형적 성장

구분	2000년	2020년
인구	4,700만 명	5,178만 명
무역 규모	3,327억 달러	9,081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5,763억 달러	1조 6,382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	1만 2,178 달러	3만 1,880 달러

자료: 국가통계포털

○ 인구와 경제 규모 등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분열되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력의 실종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깝게 불투명하다는 점이다.¹⁾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에 30대가 당선되었다. 기성세대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러나 당선된 30대 당 대표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가치관과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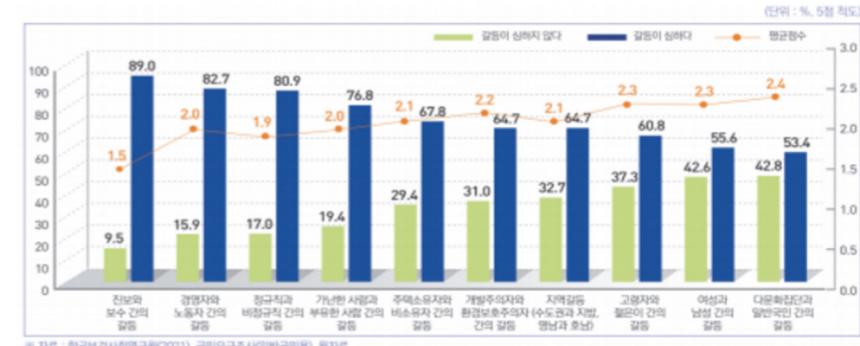
* 본고는 2021년 6월 22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부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전국 성인 인구 1천 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42.1%가 비관적 전망을, 낙관은 21.7%에 불과했다. 한겨레신문, 2019년 10월 2일.

을 갖추고, 널리 지혜를 찾을지에 대해서는 그간 보여준 언행으로 볼 때 많은 부분에서 회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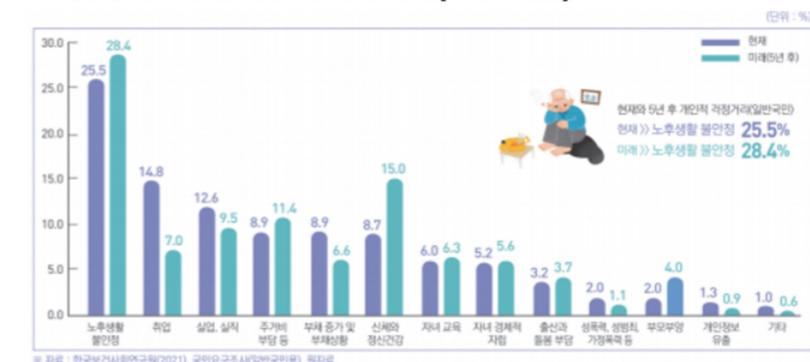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조사한 「국민요구조사(일반국민용)」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집단 갈등 현상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순으로 갈등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 한국 사회 집단 갈등 수준(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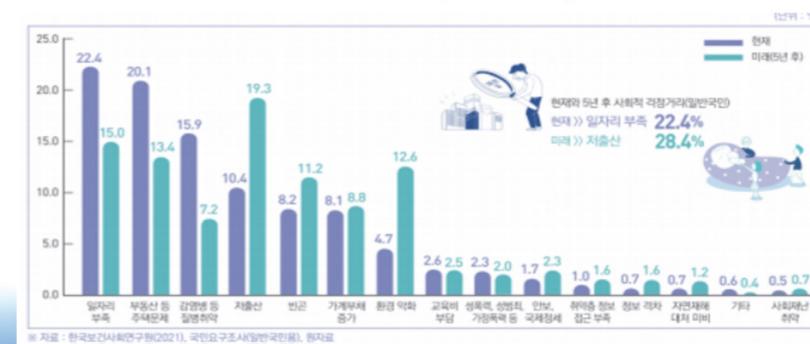
현재와 향후 5년 뒤의 개인적 걱정거리는 현재는 노후 생활의 불안정(23.5%), 취업(14.8%), 실업·실직(12.6%) 순이었고, 5년 뒤 개인적 걱정거리는 역시 노후 생활의 불안정(28.4%), 신체와 정신건강(15.0%), 주거비 부담(11.4%) 순이었다.

▶ 현재와 5년 뒤 개인적 걱정거리(일반 국민)



현재와 향후 5년 뒤의 사회적 걱정거리는 일자리 부족, 부동산 등 주택문제, 그리고 감염병 등 질병 취약문제를 들고 있다. 5년 후 사회적 걱정거리는 저출산 문제와 일자리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 현재와 5년 뒤 사회적 걱정거리(일반 국민)



1. 다중의 복합위기: 한반도의 삼중고(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전쟁위험)

- 현재 한국 사회, 나아가 한반도 구성원들이 직면한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아닌 다중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이고, 위기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방은 대중요법이나 근시안적 대처로는 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하다.
- 지구공동체는 기후 위기로 대변되는 생명의 위기, 종의 대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라는 유한한 행성에서 무한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달려온 지난 200여 년의 후과가 이제는 오히려 인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서식지 파괴로 갈 곳이 없어진 비인간 자연·생명체들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인간은 지구를 필요로 하나 지구는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의 부흥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야만적 착취와 수탈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금융자본을 필두로 한 군산복합체가 추구하는 세계화에 의해 뒷받침된다.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 피지배의 질서는 세계 체제에 편입된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형태를 달리하며 관철·재생산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으며, 일국에서 역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격차는 확대되고, 이는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역의 격차 확대로 이어진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자원과 부의 분배를 둘러싼 전쟁과 갈등은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 이러한 두 가지의 위기에 더해 한반도공동체는 지난 70년 동안 상시적 전쟁 위협에의 노출이라는 고통이 더해지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외세의 강요에 의해 분단되고, 지도자를 자처한 이들의 탐욕에 의해 끔찍한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화로 가기 위한 여정은 멀고, 그 간극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재난과 전쟁은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찾아오고, 그 고통의 폭과 깊이 역시 차원을 달리한다.²⁾
-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사회적 실천은 이러한 3개의 과제(기후 위기 극복, 불평등 해소, 전쟁 위협의 제거)를 풀어내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1. 한국판 뉴딜과 한계

- 뉴딜은 글자 그대로 New Deal, 새로운 거래 또는 협약으로서,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창한 경제부흥과 사회보장 증진 정책에서 유래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미국 역

2) UNDP의 2007년 발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해마다 평균 개발도상국 주민들 19명 중 1명이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OECD국가의 경우 피해자는 1,500명 중 1명뿐이었다. 저먼워치의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10개 국가는 모두 아시아와 남미의 개발도상국이었다. 한재각, 「기후정의: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대구시: 도서출판 한티재, 2021), 25쪽.

시 예외가 아니어서 대공황의 파고가 밀어닥치고,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대량 실직에 직면했다. 노동자들은 분노했으며, 자본가들은 당황했다. 그 결과 뉴딜이 등장한 것이다. 계급적 갈등을 완화하고, 파국에 직면한 자본주의를 구원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뉴딜은 당면한 심층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소환되지 않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라는 대중요법, 공약과 정책 패키지를 뮤은 포장지에 머물고 있다.

○ '글로벌 그린 뉴딜'은 일국적 차원의 그린 뉴딜을 서구의 혁신 발전 모델로 보편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국제적 차원의 그린 뉴딜 추진은, 과거 비서구 지역에 개발 원조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도로 시스템,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된 에너지 인프라를 아프리카를 비롯한 비서구 지역에 까는 것이다. '녹색'으로 포장된 엄청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³⁾ 2020년 5월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TF」를 구성하고,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과제를 검토한다. 3대 프로젝트는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비대면 산업 육성, ③ SOC 디지털화, 10대 중점 과제는 ①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②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③ 5G 인프라 조기 구축, ④ 5G+ 융복합 촉진, ⑤ AI데이터·인프라 확충, ⑥ 전 산업으로 AI융합 확산, ⑦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⑧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⑨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⑩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 한국판 뉴딜에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그린 뉴딜을 추가하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두 축으로 제시한다.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저성장·양극화·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2025년까지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선포한다. 2025년까지 예산 총 114.1조 원을 투입, 일자리 190.1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예산 44.8조 원, 일자리 90.3만 개, 그린 뉴딜에는 예산 42.7조 원, 일자리 65.9만 개, 안전망 강화에는 예산 26.6조 원, 일자리 33.9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0년 10월 지역 주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⁴⁾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 뉴딜 공모사업·균형발전 고려, 특구·경자구역 연계 강화, 지역산업 뉴딜 재편 지원, ②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확산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지방채 초과 발행·지방교부세 지원, 뉴딜·지역관련 펀드 투자, 균특회계 인센티브 제공,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공공기관의 뉴딜 선도사업 발굴·추진,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 ④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지역 규제 혁파, 지자체 조직·인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이창훈 외,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 개발 연구」, (세종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1), 63~64쪽.

4) 관계부처 합동, '지역과 함께 하는『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2020년 10월 13일.

○ 2020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재정 제한성을 극복하고, 민간 부문의 재원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뉴딜금융 지원방안⁵⁾을 제시한다. 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제시, ②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펀드(35%)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펀드(65%)를 결성해 '21~'25년간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신설, ③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확대, 정책형 펀드를 통해 양질의 뉴딜 인프라사업에 투자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조성, ④ 민간 뉴딜펀드: 현장 애로사항의 해소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민간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공급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판 그린 뉴딜⁶⁾은 경제 기반을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주요 분야를 보면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스쿨),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생태계 복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하수도, 먹는 물 관리), 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스마트 전력망,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선지중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③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연구 개발(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녹색금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판 뉴딜 계획의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⁷⁾

①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장기적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기회복(recovery)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디지털과 친환경 영역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전환을 위한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② 한국 정부가 2020년 10월 탄소중립 목표년도를 2050년으로 명시했으나, 목표연도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임기 말 레임덕이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 계속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③ 국가와 중앙정부 중심적 계획으로 지역 및 지방정부가 실행해야 하는 정책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절대 부족하다. 지역 및 지방정부는 뉴딜 사업의 주요 시행주체 및 이해관계자이며, 지역 고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으므로 이들의 역할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④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후위

5) 관계부처합동,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2020년 9월 3일.

6) 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2020년 7월 14일.

7) 이창훈 외,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 개발 연구", (세종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1), 70~71쪽을 참조하고, 필자의 견해를 추가했다.

기, 불평등, 전쟁위협이라는 삼중고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우선해야 하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여돼 있다. 당연히 이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⑤ 한국판 뉴딜은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의 남쪽에만 국한되어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일국적 차원의 사고와 대처만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2020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는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를 떠올릴 때 현재의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뉴딜 사업을 매개로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은 무척 아쉽다.

⑥ 한국판 뉴딜이 사회협약으로 진전되려면 논의 주체를 현재의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 중심에서 생산자 대중을 포함한 전 사회 계층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철저히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온존 내지 강화하고, 자본과 기업이 져야 할 기후 위기 책임을 세금을 쏟아 부어주면서 면탈하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1. 생명평화경제란 무엇인가?

○ 평화생명경제라는 말도 흔히 사용되지만,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가 생명이라는 점에서 생명평화경제라는 말이 보다 더 분명한 지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 현재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다중의 복합위기는 근본적으로 화석연료 의존형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월가의 금융자본과 군산복합체를 최상위로 하는 제국주의적 지배질서, 평화적 공존과 통일보다는 분단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에 기인한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탈화석, 탈시장, 탈자본, 탈성장, 탈분단을 넘어 온 사회의 녹색화, 생명사회화이다. 분단구조의 극복과 평화체제의 수립 역시 생명사회화에 대한 전망 속에 전개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기후이탈로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에서 평화는 불가능하고,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탈화석, 탈시장, 탈자본, 탈성장, 탈분단은 생명평화경제로의 전환, 즉 생명평화공동체의 구현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생명의 경제는 돈의 경제가 아닌 삶의 경제, 이윤의 경제가 아닌 필요의 경제, 독점의 경제가 아닌 나눔의 경제, 분열의 경제가 아닌 협동의 경제, 파괴의 경제가 아닌 생명의 경제, 죽임의 경제가 아닌 살림의 경제

⁸⁾, 단절이 아닌 순환의 경제, 시장과 계획 그리고 협의가 함께 하는 협의의 경제이다.⁹⁾

<표> 생명의 경제

현재의 경제	대안의 경제
돈의 경제	삶의 경제
이윤의 경제	필요의 경제
독점의 경제	나눔의 경제
분열의 경제	협동의 경제
파괴의 경제	생명의 경제
죽임의 경제	살림의 경제
단절의 경제	순환의 경제
시장의 경제	시장과 계획, 협의의 경제

8) 강수돌, 「살림의 경제학: 사람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는 실림살이 경제학」(서울시: 인물과사상사, 2009), 86쪽.

9) 나카무라 히사시 저, 윤형근 옮김, 「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지역자립의 경제학」(서울시: 도서출판 한살림, 1995), 6~9쪽.

평화의 경제는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제조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으며, 군사비를 감축하고,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다.¹⁰⁾

1. DMZ·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생명평화경제

○ 남북관계에 따라 부침은 있지만 DMZ와 접경지역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DMZ와 접경지역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은 전 한반도적 차원에서 생명평화경제로의 전환, 생명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험장이자 관건적 요소다.

1971년 유엔군 로저스 소장의 DMZ의 비무장지대화 제안 이후 역대 정권마다 다양한 평화적 이용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시, 경제특구, 생태평화공원 등...하지만 이들 제안들은 주요한 당사자인 이북이 배제되어 있었고, DMZ는 관할권 때문에 애초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비슷한 제안들이 반복적으로 제안되었고, 중앙 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사업의 결정과 집행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연히 수많은 제안들은 탄생과 함께 유작이 되었다.

<표>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안들

시기	제안자	주요 내용	비고
1971	유엔군 대표 로저스 소장	• 쌍방이 합의된 지역으로 군사인원 철수 • 군 정전위 군사시설 파괴조치 • 전체 DMZ의 비무장화 • 무장인원의 DMZ 출입금지	
1982. 2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 경의선 도로연결, DMZ내 공동경기장 건설 • 자연생태계 공동학술조사, 군사시설 제거 •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역 공동설정 • 군비통제, 군사책임자 간 직통전화 설치	민족화합 시범실천사업 으로 제시
1988. 10	노태우 대통령	• DMZ 평화시 건설	유엔총회연설
1989. 10	노태우 대통령	- 이산가족면회소, 민족문화관, 남북연합기구	국회연설
1991. 12	남북한	• DMZ의 평화적 이용 합의	남북 기본합의서
1992. 1	노태우 대통령	• 남북공동출자 합작공장 설치	연두기자회견
2001. 1	김대중 대통령	•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추진 검토 지시	환경인 신년인사회
2007. 10	노무현 대통령	• DMZ 내 초소(GP) 및 중화기 철수	남북정상회담
2008. 8	이명박 정부	• DMZ의 평화적 이용 국정과제화	각 부처별 계획수립
2013. 5 2013. 7	박근혜 대통령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미 의회 연설 정전60주년 기념사
2017. 5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접경지역 평화협력밸트 구축	공약사항
2019. 6	연천군, 강원도	• 생물권보전지역(BR) 지정	유네스코

자료 : 조한범, 정범진

10)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국방비로 301조 원의 예산을 써서 경향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7%가 넘어 지난 이명박 정부의 5.2%, 박근혜 정부의 4.1%를 상회한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중들의 재난지원금 마련마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 DMZ와 접경지역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안들이 현실성과 지속성을 갖추려면,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구축이라는 전망 속에서 생명평화경제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결국 접경지역,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주력 산업인 농업을 전면적으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에너지는 전적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햇빛, 바람, 물, 바이오 매스 등)을 통해 자급해야 한다. 다행히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비용 감소 역시 현저하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농민 또는 농촌 기본소득 지급 방안 역시 유기농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보전과 손실을 보완하는 기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기준 인천, 경기, 강원 접경지역의 농가는 총 18만 7천 가구(농민 수는 45만 8천 명)인데, 유기농으로 전체 농가가 전환하고, 이들 가구에 연 60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접경지역 전체를 유기농화하는 데 들어가는 총 예산은 1조 1220억 원이면 충분하다. 2021년 기준 한국사회의 농업예산은 16조 3천억 원 규모임에 비추어 이 정도의 비용은 무거워보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한국판 뉴딜에서 농업을 유기농으로 전면 전환하는 그린 뉴딜은 보이지 않는다. 그린 뉴딜에 들어가는 수십조 원의 예산은 농업과 무관하거나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수혜자로 하고 있을 뿐이다.

<표> 접경지역 전체농가유기농 전환 지원 기본소득 규모

구분	접경지역 농가총수	연간 기본소득	총 소요 예산
규모	18만 7천 가구	월 50만 원 × 12개월, 연 600만 원	1조 1,220억 원

1. 탈성장, 탈자본, 생명평화경제로 산업구조를 대전환!

○ 지구라는 유한한 행성에서 무한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빚어진 오늘의 위기를 또 다른 성장 담론인 그린 뉴딜을 통해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탐욕은 자본의 무한 증식으로 외화되고, 시장은 노동과 토지, 화폐 등 거의 모든 것을 상품화시켰다. 그 결과 생태계는 자본주의 200년 동안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었고, 양극화로 대변되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시장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며, 기술은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난 역사는警醒한다.

그린 뉴딜이라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학대와 심화만이 현재의 왜곡된 논의와 흐름을 저지할 수 있다. 탈성장, 탈자본은 인간이 지금까지 다른 피지배 인간은 물론 비인간 자연과 생명,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가해온 폭력과 착취, 야만의 경제를 넘어 생명평화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린 뉴딜이 아니라 탈성장, 탈자본, 생명평화경제로의 전환이 답이다.

- 이상 끝 -

